

이슈브리프 439호
(2023. 6. 8)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

김경숙 신홍안보연구실
홍건식 신홍안보연구실

제439호



국문초록

일본 히로시마에서 48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5.19~21)가 개최되었다. 한국은 4년 연속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주목할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중대한 위협임을 지적하고 '경제안보'가 별도의 공식의제로 처음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G7 국가들이 정상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경제 안보 대응을 위한 공동 연대 그리고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G7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 차원의 공동 대응 강화에 뜻을 함께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 중국을 19차례(러시아는 23차례) 언급했을 정도로 '반중국' 메시지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의장국 일본이 한국과 호주 외에도 베트남, 브라질, 인도(2023년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2023년 ASEAN 의장국) 등 글로벌 남부의 대표 국가들을 초청한 이유도 중국을 견제하고 국제적 공동 대응을 추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G7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G7 정상회의 직후 중국은 주중 일본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했고,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제재하는 등 G7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로 맞대응 했다. 글로벌과 지역 차원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을 직시하고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1)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 (2) 마음을 함께 하는 국가들과 전략 외교 추진 (3)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입법 체계 등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경제 안보 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핵심어: G7 정상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위기관리, 경제 강압, 공급망 회복력

G7,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 위상 재확인

일본 히로시마에서 48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5.19~21)가 개최되었고, 한국은 4년 연속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에 한국의 역할에 공감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보존”(Upholding the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과 “글로벌 남부와의 연결”(Outreach to the Global South)을 주제로 한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G7 정상 공동성명과 5개 분야별 개별 공동성명 및 4개의 별도문서(부속서)를 채택했다. 40쪽 분량의 G7 정상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대중 관계, 비확산, 경제안보, 디지털 규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식량 등 복합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대와 협력방안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안보 관련 공동성명의 주요 특징

이번 정상들은 총 9개 세션에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는데, ‘경제안보’를 별도의 공식 의제로 처음 다루었다. 이는 G7 국가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경제 강압이 세계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했음을 방증한다. 2022년 G7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중요하게 다뤘지만, 2023년 G7 정상회의에서는 경제 회복력과 경제안보를 초점으로 7가지 차원으로 더 구체화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세 가지 특징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미중 전략 경쟁으로 진영화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위험관리(de-risking)로 설정했다. 둘째,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한 공동의 조율된 대응 메커니즘 구축을 강조했다. 셋째, 글로벌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 경제 회복력(economic resilience)을 위해 다자 협력, 특히 WTO를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다변화, 기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개별 또는 공동 체계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 설정: 위험관리(de-risking)

이번 G7 정상회의의 특이점은 단연 위험관리, ‘디리스크잉’ (de-risking)이다. 미중 전략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G7 국가들은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즉 탈동조화를 선택하기 보다는 디리스크잉(de-risking) 또는 위험 제거를 점차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요한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되 배제가 아니라 중국 위험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디리스크잉은 지난 3월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 한 연설에서 밝힌 것이다.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유럽의 이익에 들어맞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선택보다는 경제 안보를 고려한 디리스크잉에 초점을 둔 것이다. EU는 상호 의존관계인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인 접근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G7 정상회에서 이런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도 중국과의 탈동조화가 현실성이 낮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초는 지난 4월 17일 존 설리번(John Sullivan) 미 국무부 부장관(Deputy Secretary of State)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크잉”을 지지한다면서 “디리스크잉을 근본적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어느 국가의 강압에 종속될 수 없다는 점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G7 정상회의 직후 바이든 대통령(Joe Biden)은 중국과 개방적인 핫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미·중 관계가 곧 해빙될 것

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제조력과 시장력을 고려했을 때, 그 어떠한 국가도 중국과의 탈동조화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발언들이라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과 유럽이 말하는 ‘디리스팅’ 전략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안보와 공급망 분야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되, 중국과 협력할 건 협력해 충돌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관영 글로벌 타임스 사설을 통해 “위장된 디커플링”이라고 비난하였다. 용어가 바뀌었어도 중국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미·중 관계의 ‘해빙’ 언급에 앞서 제재 철회부터 하라고 맞대응하였다.

경제 강압 대응

G7 정상들은 경제 회복력과 경제 안보를 위해 중국의 경제 강압 (economic coercion)에 공동 대응 차원에서 협력 플랫폼 즉, “경제 강압 조율 플랫폼”(coordination platform on economic coercion)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경제 강압은 중국이 외교적 마찰이 있을 때 상대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여 정책 변경을 압박¹⁾하는 수단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G7은 중국이 지난 10년간 한국, 일본, 호주, 리투아니아 등에 대해 경제적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강압에 대한 조율 플랫폼을 구축해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G7을 넘어 우방국들과도 공급망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신속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시사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 강압에 집단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7 정상회의 직후 중국이 보복성 조치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1) Henry Farrell and Abraham Newman,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44 (2019), pp. 42-79.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다자협력 강조

G7 정상회의 참여국들은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보호를 위해 응집력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이중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다자협력을 강조하였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범과 규칙을 증진하는 조치를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미중 전략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양자 관계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WTO를 핵심으로 규범 및 시장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다자협력을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의 경제 강압과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은 물론 기존에 구축되어있는 다자협력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형행화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혁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공급망 회복을 위해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의 자국 시장 보호도 허용하면서 ‘비시장적 정책에 대한 대응 강화’를 표명한 것은 불투명한 산업보조금, 강제 기술 이전 등에 WTO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향후 G7 국가들이 WTO를 통한 규범 기반의 자유무역 질서 회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미 하원에서 논쟁이 되었던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 역시 미중 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G7은 핵심 광물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확보를 위한 다변화 차원에서 글로벌 남부(Global South)와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주목할 것은 과도한 중국 의존을 줄이고,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을 위해 G7을 넘어 신흥국과도 협력하고 글로벌 남부의 인프라 건설 지원과 연계를 언급한 부분이다. 이는 의장국인 일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G7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Investment, PGII)을 통해 글로벌 남부에서 양질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투자하기로 약

속하였다. PGII는 2022년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2027년까지 중·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총 6,000억 달러(약 780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남부와의 연계를 강조한 것은 핵심 광물의 새로운 공급망을 확보하고 중국 견제에 글로벌 남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공급망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 확보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G7 정상들은 세계은행 등과 협력하여 2023년 말까지 ‘RISE (강인하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신흥국, 개발도상국 등도 참여하는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재정, 공적 금융수단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핵심광물은 클린에너지 이행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광물안전보장 파트너십(MSP)’을 통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경제안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한국은 G7에 초청국 자격으로 4년 연속 참여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G7 플러스의 유력한 국가로서 한국은 국제적인 복합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G7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공조 강화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역량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복합위기 속에서 한국의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회복력이란 위기 발생시 정상상태 또는 그 이상으로의 상태 회복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급망 회복을 위해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미일 공조는 물론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자적 차원의 경제 안보 협력 추진도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G20이 계속 표류한다면 G20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G7 플러스가 글로벌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고 경제 전략을 조율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한국은 G7의 PGII, 경제강압 조율 플랫폼에 적극 동참하고 인태지역 국가들과도 개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물 자원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가 많은 베트남, 자원부국 인도네시아 등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29일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에 합의하고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을 무기로 하는 중국에 맞서 공동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마음을 함께 하는 국가(like-mind)들과 전략적, 포괄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 권위주의 국가, 비동맹(글로벌 사우스)으로 3등분 되었다.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은 디지털 분야 영향력을 활용해 디지털 규범 제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은 전 영역에서의 경쟁이 아닌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견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 강압이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 중국의 보복성 조치는 마이크론 구매 중단에 그치지 않고 다른 미국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경고성 조치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국 측이 정부에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중국 내 빈자리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다.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단 10월까지 유예 기간을 확보했으나, 미국이 반도체 첨단 장비 반입을 허가하지 않으면 중국 내 한국 공장 운영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에, 한국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 만큼 원칙을 고수하되 실리외교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안보에 위협되지 않는 영역에서 중국과의 협력도 지속하는 등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고위급 소통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반도체, 북핵 문제 등 협력 가능 영역을 시작으로 전략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경제의 안보화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국내적으로 중요한 전략 물자에 대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경제안보법’ 제정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공급망 100일 검토를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광물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EU는 통합적으로 전략 산업 공급망 확보와 직접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 보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법적 조치는 물론 민관 연계 협력을 통해 안정적 공급확보와 함께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데이터 공유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